

2026년 국정감사 일일 종합 심층보고서

질의의 쟁점을 데이터로, 기관 답변을 검증 과제로, 후속 약속을 실행관리로

자료 성격

공통 정책 검토자료
공식 회의록 대조 전

분석 기준일

2026-10-08

문서 구분

일일 통합 심층분석

A4 배포용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국회방송 공식 영상 13편을 상임위별로 통합하고, 주요 쟁점·질의답변·후속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주장과 기관 답변을 구분해 읽고, 실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보고서를 읽는 법

각 핵심 사실은 '외통위 1부 · 07:18:19'와 같은 근거표시로 추적합니다. 표시를 누르면 원본 영상의 해당 시각으로 이동하며, 영상 ID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개 상임위 · 전사 기반 교차분석

공식 자막 및 Whisper 전사 → 영상별 구조화 분석 → 상임위별 통합 → 공통 의제 정리

13

분석 대상
공식 영상

8

통합 분석
상임위원회

107

구조화된
핵심 쟁점

108

추적 대상
후속조치

목차와 분석 기준

01	1. 일일 핵심 판단
02	2. 범상임위 교차 의제
03	3. 분야별 후속 검토사항
04	4. 상임위별 심층 분석
05	5. 통합 이행 추적표
06	부록 A. 분석 대상 및 데이터 품질

보고서의 판단 단위

질의자의 문제 제기는 '주장', 피감기관의 발언은 '답변', 전사와 복수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근거', 후속 검토사항은 '분석적 제언'으로 구분했습니다.

근거표시 읽는 법

'외통위 1부 · 07:18:19'처럼 위원회·영상 구분·시각을 표시합니다. PDF에서 누르면 원본 영상의 해당 시각으로 이동합니다.

분석 범위

13개 공식 영상
8개 상임위원회
YouTube 자막 3편
Whisper 전사 10편

국방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정부위원회

사용 시 유의사항

자동 전사는 숫자·고유명사·발언자 식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법적 판단, 대외 발표 전에는 국회 공식 회의록과 원본 영상을 재확인하십시오.

일일 종합분석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 13편 · 8개 상임위

재정렌즈 · 공통판

전사 근거 자동대조

사람 검토 필요

13/13

원천자료 완전성

380/380

영상 인용 유효성

30/114

주장·전사 자동대조

17/97

수치 근거 자동대조

자동대조에서 84건을 사람 검토 대상으로 분리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공개 후 최종 대조가 필요합니다.

- **분석 범위:** 8개 상임위원회 · 13개 공식 영상
- **전사 구성:** YouTube 자막 3편 · Whisper 10편
- **통합 근거:** 구조화 쟁점 107건 · 주요 문답 123건 · 후속조치 108건
- **판독 원칙:** 질의·답변·확인 사실·분석적 시사점을 구분하고 모든 중요 판단을 원본 영상 시각으로 추적

1. 일일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는 정책 집행의 **구조적 이중잣대**와 **사전 대응 체계 부재**라는 공통 패턴을 드러냈다. 국방·국토·기상·문화유산·법무·보건·재정·금융 등 8개 위원회 감사에서 반복 확인된 핵심은, 정부가 위기 발생 후 사후 대응에 급급하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해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세계유산 보호와 개발 조정에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세운사지구(종묘 인근 180m)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미실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4:55**, 태릉CC(세계유산지구 내 13% 중첩)는 7개월 만에 신속 처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11:47**, 새만금 국제공항(서천 갯벌 인근)은 법원 취소 판결 후에도 소극 대응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2:00:00**. 위원들은 "사업 시행자의 협조 태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며 원칙 부재를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50:09**.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국제 공약(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과 국내 개발 압력 사이에서 일관된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 대응 체계 부재는 재난·안전 영역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 기상청은 2025년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시간당 124.5mm, 200년 빈도) 당시 수치예보모델(KIM)이 100mm 이상을 예측했으나 예보관이 30~50mm로 발표하고 새벽 2시에야 수정했으며 **기후노동위 전체 · 00:50:18**, 기상청장은 당일 자택 근무하며 분청 경계근무를 하향 조정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합참은 2023년 9월부터 위성으로 북한의 MDL 근접 지뢰 매설 작업을 식별했으나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국방위원회 전체 · 07:11:21**, 2026년 9월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 후에야 10월 6일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48:14**. 신한은행은 이사회가 작년 AI 공격 대비 투자를 경고했음에도 정보보호 예산을 5대 은행 중 가장 적게 편성하고 70%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무위 2부 · 01:50:54**, 금감원은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부여한 한 달 반 뒤 25,727건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무위 2부 · 01:49:16**. 이들 사례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조직 내부의 판단 오류·책임 회피·관행적 평가가 위기를 키웠음을 보여준다.

재정·금융 정책에서는 **제도 설계의 법적 근거 부족**과 **국회 통제 우회** 시도가 두드러졌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요건 10가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재경위 1부 · 05:33:08**, 장관은 "적법하게 설계했다"는 반복 답변만 했고 구체적 법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경위 1부 · 05:32:03**. 지방교부세가 현행 산식 대비 30.5조 원 감소하며 경북 7조 원 등 시도별 충격이 예상되나 **재경위 1부 · 05:31:00**, 장관은 총량 기준 증가만 강조하고 단년도 감소 대책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검토"로 미뤘다 **재경위 1부 · 05:34:59**.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2026년 1월 13일 이전 내부 검토자료가 전무하고 금감원

용역보고서는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정무위 1부 · 08:08:02, 상장 5일 만에 음의 괴리율 발생 후 규정 개정
2개월이 소요됐다 정무위 2부 · 03:53:04. 이는 정책 결정이 법적·기술적 검토보다 정치적 일정에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범상임위 교차 의제

2.1. 지방재정 축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모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지방재정 축소 문제가 교차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현행 산식 대비 30.5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5조 원 감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경위 1부 · 05:31:00](#). 경북은 7조 원 감소가 예상되며, 박홍근 장관은 "2028년 101조로 증가한다"며 총량 기준 증가를 강조했으나 단년도 감소 영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재경위 1부 · 05:31:33](#).

같은 시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공사 부채가 2025년 4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연 4천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나 정부 보전은 최근 5년간 전무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0:07:01](#),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1:09:04](#).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통행료 감면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 안을 국감 종료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07:20](#),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과 도로공사 재정 여건이 교통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사업계획과 재원 내역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3.5조 자율재원 배분 기준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국토부는 도로공사 재정 정상화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2.2.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격차 심화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험이 교차 확인됐다.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총원율은 약 43%에 그쳤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한 명도 뽑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20:37](#),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28:11](#). 전북대병원은 2026년 7월 전담 전문의 휴가로 신생아가 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18:56](#). 복지부는 신규 전문의 인건비 보조 및 기존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보조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한시적 2년 운영 후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8:26](#).

같은 시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의성산불 피해 국가지정유산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2025년 의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 등록유산 11건 중 복구 완료는 5건에 그쳤으며, 보물급인 고은사연수전 등은 설계 단계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59: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1:01](#). 국가유산청장은 2025~2030년 복구 예산을 밝혔으나 5년 소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4:24](#).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인건비 보조 예산의 지역별 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국가유산청은 의성 복구 일정을 단축해야 한다.

2.3. 외국인 정책의 인권·관리 이중 사각지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와 관리 부실이 동시에 드러났다. 2026년 8월 27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과정에서 목 조르기, 갈비뼈·머리 가격, 덕테이프로 입 봉쇄, 두건 씌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법사위 1부 · 07:44:02](#). 법무부 차관은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고 감찰 착수를 약속했다 [법사위 1부 · 07:47:15](#). 반면 2023년 7월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책 이후 베트남 유학생들이 대거 불법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6년 1~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 1,132명, 보험사기 37건 1억2천만원이 확인됐다 [법사위 1부 · 07:59:17](#), [법사위 1부 · 08:00:50](#). 광주 출입국사무소는 14명을 단속했으나 영업점 적발은 0건으로 단속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법사위 1부 · 08:05:00](#).

외국인 인권 보호 체계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불법취업 단속 체계는 유명무실하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과정의 물리력 사용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불법취업 단속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2.4. 기상예보 실패와 재난대응 체계의 구조적 허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재난대응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교차 확인됐다. 기상청은 2025년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 (시간당 124.5mm, 200년 빈도) 예측에 실패했다. 수치예보모델(KIM)은 100mm 이상 예측했으나 실제 예보는 30~50mm로 발표하고 새벽 2시에야 수정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50:18](#),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기상청장이 당일 자택 근무하며 본청은 경계근무로 하향 조정한 반면 부산기상청은 2단계 비상근무를 유지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100mm 강우 중에도 재난문자가 11분 지연 발송되고 기존 호우문자와 내용 차별화가 없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3:50](#).

같은 시기 국방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21일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 시 지뢰 탐지 장비(PRS-20K)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17:39**. 합참의장은 "장비 전후 과정 및 개발 내용을 살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비금속 지뢰 탐지 성능, 개발 당시 시험평가 결과서, 토양·지형 조건별 실전 탐지 데이터 등의 제출이 요구됐다. 기상예보 실패와 군 장비 성능 미달은 모두 재난·안보 상황에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기상청은 예보관 판단과 수치모델 결과 간 괴리를 해소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는 지뢰 탐지 장비 성능 및 사고 전후 점검 결과를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2.5. 금융·교통 분야 AI 보안 대응 미흡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AI 시대 보안 대응 미흡이 교차 확인됐다. 2026년 9월 28일 신한은행에서 25,72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시기 공격받은 국민은행(153건), 하나은행(89건)에 비해 피해가 컸으며, 이사회가 작년 AI 공격 대비 투자를 경고했음에도 정보보호 예산은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고 편성 예산의 70%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무위 2부 · 01:49:16**, **정무위 2부 · 01:50:54**. 박민규 의원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은행 전산망에서 AI 보안도구 활용이 원천 차단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목적 AI를 망분리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 1부 · 06:33:29**.

같은 시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테슬라 등 전기차의 개인정보가 해외 본사로 이전되고,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4:4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14:27**.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개인정보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53:59**. 금융과 교통 분야 모두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보안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보안 목적 AI의 망분리 예외 인정 및 중소 금융사 공동 보안 AI 체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전기차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분야별 후속 검토사항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한 공통 검토사항이다. 특정 지역의 피해 규모나 지원 가능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기관별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분야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	후속 확인자료
국방·안보	지뢰 탐지 장비 성능과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한 질의 국방위원회 전체 · 08:17:39	장비 시험평가 결과, 현장 점검 기록, 후속 보고 내용
교통·재정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손실과 보전 방안에 대한 질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1:09:04	손실 산정 기준, 정부 보전 내역, 기관이 제시할 개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07:20
재난·안전	수치예보와 실제 예보의 차이, 재난문자 전달 시점에 대한 질의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예보 수정 이력, 비상근무 기록, 재난문자 발송 기록
문화유산	산불 피해 유산의 복구 진척과 소요 기간에 대한 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4:24	유산별 복구 일정, 설계·계약·집행 현황과 지연 사유
지방재정	기금 신설과 교부재원 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 재경위 1부 · 05:31:00	현행·변경 산식, 비교 기준연도, 지역별 추계와 기관 답변의 차이
정책금융	지역성장 지원펀드의 관할 범위에 대한 질의와 조치 답변 정무위 1부 · 06:54:48	변경된 운영 기준과 공고, 실제 지원 대상 및 시행 시점

4. 상임위별 심층 분석

당일 분석 대상과 각 상임위의 중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각 장은 1:2부 전사, 구조화 쟁점, 개별보고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다.

- **4.1. 국방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7건 · 후속조치 7건
- **4.2. 국토교통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8건 · 후속조치 8건
- **4.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8건 · 후속조치 11건
- **4.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24건 · 후속조치 19건
- **4.5. 법제사법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8건
- **4.6. 보건복지위원회:** 3편 · 2부·단일 영상·1부 · 쟁점 24건 · 후속조치 24건
- **4.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8건 · 후속조치 9건
- **4.8. 정무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2건 · 후속조치 22건

4.1. 국방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10개 작전통제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14:32](#). 감사는 2026년 9월 21일 발생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작전태세 전반을 점검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 북한의 MDL 근접 작업 대응,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드론 전력 구축 등 국방 정책 전반을 다뤘다.

합참의장은 지뢰 폭발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10월 6일 북한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48:14](#). 그러나 초기 발표문에 '도발' 표현이 누락된 점, 지뢰 탐지 장비(PRS-20K) 성능 미달, '빈충 경계' 지침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참의장은 "한미 협의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전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방위원회 전체 · 08:42:02](#), FOC 평가 결과의 구체적 충족도는 비공개로 남았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과 대응 체계

2026년 9월 21일 25사단 DMZ 수색로 개척 중 지뢰 폭발로 장병이 중상을 입었다. 합참은 합동 현장 조사 및 유엔사 의견을 종합해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최종 판단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48:14](#). 그러나 임종덕 의원은 합참 발표문에 '도발' 표현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도발이나 아니냐가 군의 대응 강도를 결정하는데 왜 안 넣었느냐"고 추궁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1:01:51](#). 합참의장은 "조사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으나 처음부터 도발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유영하 의원은 지뢰 탐지 장비 PRS-20K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합참의장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비 전후 과정 및 개발 내용을 살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17:39](#). 비금속 지뢰 탐지 성능, 개발 당시 시험평가 결과서, 토양·지형 조건별 실전 탐지 데이터, 사고 전후 장비 점검 기록 등의 제출이 요구되었다. 또한 전 1군단장(당시 25사단장) 한기성 증인은 경계 작전 지침을 '삼탄'에서 '휴대'로 완화한 것에 대해 "조정 규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조치했으며 대비태세에 문제없었다"고 답변했으나 [국방위원회 전체 · 06:46:01](#), 의원들은 장병 안전 위협 및 상급부대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았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한미 정보 공유

합참의장은 "전작권은 반드시 전환되어야 하며 한미 협의를 통해 조기 전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52:07](#). 천준호 위원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느냐"고 묻자 합참의장은 "한미 협의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전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42:02](#). 민홍철 의원은 "전평시 작전통제권 이원화를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합참의장은 "전평시를 한 사람의 지휘관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42:00](#).

그러나 FOC 평가 결과의 구체적 충족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합참의장은 "미국은 미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국방위원회에 비공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7:21:44](#). 한편 일부 의원은 북한 핵 관련 '중요 정보'를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를 제기했으나, 합참은 "일부 제한되나 작전 수행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27:24](#), [국방위원회 전체 · 00:28:26](#). 한미 사이버 안보 실무협의체에서 국정원 배제 사례도 지적되었다.

3. 북한 MDL 근접 작업과 군사적 대응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근접 지역에 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13:19](#). 합참은 2023년 9월부터 위성으로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위원회 전체 · 07:11:21](#). 국가안보실장은 '단순 월경'으로 평가했으나 합참은 '전략적 상황 변화'로 인식했다. 임종덕 의원은 "2024년부터 MDL 이남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 식별되었다는 국방부 정보본부장 답변이 있었다"며 사전 인지 여부를 추궁했다.

경계 작전 지침 완화 논란도 제기되었다. 1군단장은 "군단장이 탄약 발수도 적시성·충분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답변했으나 [국방위원회 전체 · 06:01:36](#), 의원들은 "기후나 지형이 아닌 군단 전체에 일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02:00](#). 또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오경보율이 높고(2026년 2,200건, 장비 결함 41%) 이스라엘 아이언돔 무력화 사례를 들어 성급한 병력 감축(2040년까지 22,000명→6,000명, 73%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02:00](#), [국방위원회 전체 · 06:06:59](#), [국방위원회 전체 · 07:54:04](#).

4.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정부는 2035년까지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3척 건조 목표를 제시했다. 한기호 의원은 "핵잠수함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합참의장은 "공개적으로 밝히기 제한되나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45:39](#) . 그러나 의원들은 원자로 설계·개발 미완료, 핵연료 확보 미정, 건조 시설 부재, 승조원 양성 계획 부족 등을 들어 10년 내 완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24:14](#) , [국방위원회 전체 · 07:01:26](#) , [국방위원회 전체 · 08:26:00](#) , [국방위원회 전체 · 08:46:41](#) . 척당 10조원 소요 예상, 운용비 부담 과다 문제도 제기되었다. 일부 의원은 "일본과 독일, 캐나다도 왜 안 만드느냐"며 "정치적 결정을 군인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46:41](#) .

5. 드론 전력 구축과 질적 전력화 과제

국방부는 2만 대 드론 확보, 50만 드론 전사 양성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51:26](#) . 그러나 의원들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전력화 (전자전 전문가, 표적 분석관, 정비원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54:29](#) . 자폭드론 1형 구매 과정에서 합참 소요 검증을 패싱하고 성능 미달로 컨테이너에 방치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원회 전체 · 01:16:42](#) . 드론 통합관제 체계 예산도 미반영되었다. 합참의장은 "드론 대드론 TF 운영 중이며 운용 개념 발전 중"이라고 답변하고 국방 드론 통합센터 계획을 밝혔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56:08](#) , [국방위원회 전체 · 07:04:30](#)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진성준 위원장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도발인가"라고 질의했고, 합참의장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0:14:32](#) . 그러나 임종덕 의원은 초기 발표문에 '도발' 표현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고, 합참의장은 "조사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1:01:51](#) . 이는 합참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동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한기호 의원은 "북중러 조약과 한미동맹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라고 질의했고, 합참의장은 "문구상으로는 북중러 조약이 강해 보이나 시스템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훨씬 능가한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5:41:46](#) .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내년까지 목표로 선언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고, 합참의장은 "한미 협의를 통해 조기 전환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52:07](#) . 천준호 위원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느냐"고 묻자 합참의장은 "한미 협의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전환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국방위원회 전체 · 08:42:02](#) , 구체적 충족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영하 의원은 "지뢰 탐지 장비 PRS-20K가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고, 합참의장은 "장비 전후 과정 및 개발 내용을 살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8:17:39](#) . 강선영 의원은 "25사단 수색로 개척 작전 결정 시점"을 질의했고, 지상작전사령관은 "8월 31일 유엔사에 보고했으며 그 이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전체 · 06:34:45](#) . 한기성 증인(전 1군단장)은 "삽탄 대신 휴대로 경계 지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조정 규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조치했으며 대비태세에 문제없었다"고 답변했으나 [국방위원회 전체 · 06:46:01](#) , 의원들은 장병 안전 위협 및 상급부대 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FOC 평가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7:21:44](#) . 드론 대드론 TF 운영 결과 및 운용 개념 발전 사항 보고(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0:56:08](#) , 바디캠 영상 보안 관리 실태 확인 후 보고(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1:43:50](#) , 지뢰 탐지 장비 PRS-20K 성능 및 사고 전후 점검 결과 보고(종합국감 전) [국방위원회 전체 · 08:18:12](#) , 코브라 헬기 조기 도태 시 전력 공백 방지 대책 검토(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8:53:56](#) , 스마트 글래스 및 중국산 전기차 부대 반입 기준 마련(최단 시간 내) [국방위원회 전체 · 08:27:03](#) , 동명부대 파병 연장 검토(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8:48:20](#) 등이 확인되었다.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첫째, 지뢰 탐지 장비 PRS-20K의 성능 미달 원인과 개발·도입 과정의 적정성이 규명되지 않았다. 비금속 지뢰 탐지 성능, 시험평가 결과서, 토양·지형 조건별 실전 데이터, 사고 전후 점검 기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둘째, 전작권 전환 FOC 평가 결과의 구체적 충족도가 비공개로 남아 있어 국회 차원의 검증이 불가능하다. 셋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의 기술적·예산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요 결정 과정, 예산, 작전 용도 등이 답변 회피되었다. 넷째, 자폭드론 1형 구매 과정에서 합참 소요 검증 패싱 경위와 성능 미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다섯째, 북한 MDL 근접 작업에 대한 초기 대응 미흡 책임과 경계 작전 지침 완화의 적절성이 논란으로 남았다.

4.2.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0:07:01](#) . 감사는 도로 인프라 운영, 교통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품질, 재정건전성 등 다층적 영역을 포괄했다.

핵심 판단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도로공사의 재정위기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부채가 2021년 31조 원에서 2025년 4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이자 부담만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0:07:01](#) .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연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정부 보전은 최근 5년간 전무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1:09:04](#) . 둘째,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전관리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 등 전기차의 개인정보가 해외 본사로 이전되고,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4:40:00](#)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14:27](#) . 셋째, 기계식 주차장 등 노후 시설물의 안전검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국 36,000기 중 65%가 10년 이상 노후되었으나 실제 미검수율은 공단 발표(14%)와 달리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18:12](#)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22:30](#) .

쟁점별 심층 분석

도로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유정훈 사장은 2030년까지 부채비율이 108.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06:28](#) . 문제의 핵심은 정책적 통행료 감면이 공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하면서도 정부 보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총 3.7조 원을 투자하여 함양울산 등 주요 노선을 개통"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0:14:23](#) 재원 조달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통행료 감면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 국회 예산 심의 시 적극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07:20](#) 구체적 이행 기한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책 부담이 재정 위기로 전이되는 전형적 사례로, 중앙정부-공공기관 간 비용 분담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화 지연 정부는 2025년 7월 휴게소 직영화 방침을 발표하고 수수료를 37.4%에서 8~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0:14:23](#)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56:19](#) 실제 시행은 지연되고 있다. 8개 시범 휴게소 운영이 계획되었으나 입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으로 설정되어 소상공인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55:10](#) . 유정훈 사장은 "8개 시범 휴게소를 설 연휴 전까지 개장하고, 소상공인 진입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56:19](#) . 그러나 직영화가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운영 효율 저하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전기차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조인철 위원은 "자동차는 밖에 달린 컴퓨터"라며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56:19](#) . 테슬라 등 전기차의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고, 전원 차단 시 문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로 화재 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4:40:00](#)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25:01](#)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개인정보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53:59](#) . 그러나 FSD 등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검증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며,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면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17:26](#) 기술 검증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났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부실 장경태 위원은 전국 36,000기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 15,000기, 10년 이상이 23,000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18:12](#) . 공단이 제출한 미검수율 14%는 "검사 대상에서 수검 건수를 빼야 미검수율이 나오는데" 계산 방식이 잘못되어 실제로는 40% 수준이라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22:30](#) . 최근 5년간 사고 출동 건수가 연평균 190건 이상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34:49](#) , 정밀안전검사 미실시 시설에서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정용식 이사장은 "정확한 미검수율 통계를 재산정하여 보고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미검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24:14](#) 지자체 협조 없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2021~2025년 터널 사고 554건, 사망 48명이 발생했으며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5배에 달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1:44:00](#) . 순찰차 출동 평균 15분으로 골든타임 6분을 초과하며, 안전순찰원의 권한 부족으로 신속 대응이 어렵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5:09:37](#) . 유정훈 사장은 "AI 기반 실시간 사고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찰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5:10:07](#) . 그러나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순찰 인력 증원과 권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민자고속도로 과다 지원 논란 최근 5년간 통행료 인하 차액보전 2조 1,300억 원, MRG(최소수익보장) 지원 등으로 민자사업자는 배당을 실시하는 반면 도로공사는 부채가 증가하는 불균형이 지적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4:39:44](#) .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7,100억 원 지원 중 4,000억 원이 배당으로 유출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4:41:29](#) . 위원들은 민간 수익 보장과 공공기관 재정 악화의 모순을 비판했으나, 국토부는 계약 조건 준수 필요성을 들어 즉각적 시정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가 하루 평균 11시간 노동에 프레시백 회수 1시간을 추가로 부담하며, 수수료는 2020년 860원에서 2025년 844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12:13](#)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43:45](#) . 위원들은 사회적 합의 지원을 비판했으나 국토부는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43:45](#) .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가해자 구상금 미회수 외국인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금 48억 6,600만 원 중 회수액이 0.4%에 불과하며, 출국 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29:19](#)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32:05](#) . 김성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원장은 "국토부,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출국 전 구상금 확보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32:37](#) . 그러나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이행 주체	약속 내용	기한	근거 시각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감면 손실 보전 구제안 마련, 국토부 협의 및 국회 예산 심의 시 요청	미정	07:07:20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8개 시범 휴게소 설 연휴 전 개장, 소상공인 진입 기준 재검토 보고	2027년 설 연휴 전	08:56:19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기계식 주차장 미검수율 재산정 및 개선 방안 보고	종합감사 전	08:24:14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BYD 등 중국산 전기차 개인정보 이전 실태 점검 및 조치 계획 보고	종합감사 전	06:53:59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AI 기반 사고 감지 시스템 구축, 순찰차 출동시간 단축 방안 보고	미정	05:10:07
김성만 손해배상진흥원 부원장	외국인 출국 전 구상금 확보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	종합감사 전	08:32:37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위한 태양광 설치 계획 대폭 확대 보고	미정	07:17:26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안성시 협의 휴게소 병원 운영 재개 방안 및 비용 분담 방안 마련	미정	07:22:54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도로공사 재정 정상화 경로의 불확실성 통행료 감면 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030년 부채비율 108.8%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 부실화가 재정 위기로 전이될 수 있으나, 구조적 해법(통행료 현실화, 정부 출연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재하다.

전기차 안전 검증 체계의 공백 개인정보 이전 실태 점검 약속은 사후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FSD 등 자율주행 기능의 사전 안전성 검증 의무화, 전원 차단 시 비상 탈출 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입법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계식 주차장 미검수율 실태 공단과 위원 간 통계 해석 차이(14% vs 40%)가 해소되지 않았다. 지자체 협조 없이는 미검수율 개선이 어려우나, 지자체에 대한 강제 수단이나 인센티브 체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민자고속도로 수익 보장 재검토 MRG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이 공공 재정을 압박하나, 계약 조건 재협상이나 향후 민자사업 구조 개선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4.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수치예보센터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2025년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시간당 124.5mm, 200년 빈도) 예측 실패를 중심으로 예보 정확도 저하, 관측인프라 노후화, 재난대응체계 미흡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50:18**. 위원회는 기상청이 수치예보모델(KIM)은 100mm 이상 예측했으나 실제 예보는 30~50mm로 발표하고 새벽 2시에야 수정한 점, 기상청장이 당일 자택 근무하며 본청은 경계근무로 하향 조정한 반면 부산기상청은 2단계 비상근무를 유지한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2026년 여름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CSI) 0.38, 6월 0.26으로 최근 10년 최저를 기록했으나 기상청은 ACC(강수유무 적중률) 90% 이상을 강조해 국민체감과 괴리된 지표 사용 비판을 받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2:08:07**.

핵심 판단은 예보관 판단과 수치모델 결과 간 괴리, 해상관측망 공백(육상 650개 대비 해상 108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5호기 6차 유찰로 인한 인프라 노후화, 폭염 중대경보 운영 부실(83건 중 67건 기준 미달), 재난문자 발송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스템 실패로 규정됐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3:14**, **기후노동위 전체 · 05:48:20**, **기후노동위 전체 · 06:30:30**.

쟁점별 심층 분석

거제·통영 극한호우 예측 실패와 방재기상 대응체계 이종배 의원은 2025년 8월 17일 거제 654.3mm 폭우 당시 초단기예보가 0.8mm 예측했으나 실제 116.8mm가 왔고, 본청은 특보구역 30개 기준으로 경계근무로 낮쳤으나 부산청은 2단계 비상근무를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46:02**. 임의선 기상청장은 "방재기상업무규정상 본청은 특보구역 기준으로 근무단계를 조정하며, 당시 150mm 예상으로 안심했던 부분이 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답변했으나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예보관 판단이 수치모델 결과를 과소평가한 구조적 원인은 해명하지 못했다. 김서희 의원은 100mm 강우 중에도 재난문자가 11분 지연 발송되고 기존 호우문자와 내용 차별화가 없으며, 산사태경보는 기상청→산림청→지자체 단계를 거쳐 골든타임을 상실한다고 비판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3:50**. 기상청은 행안부와 협의해 재난성호우 문자를 거부 불가능 단계로 상향하고, 산림청과 대피문자 발송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이행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4:50**.

예보 정확도 지표 논란과 국민체감 괴리 김의상 의원은 기상청이 7월 예보 정확도를 POD(강수유무 적중비율) 10년 중 2위라 해명했으나 CSI(임계성공지수)로는 10년 최저인 점을 지적하며 "국민 관심사는 CSI인데 왜 다른 지표로 해명하느냐"고 질의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2:08:07**. 임 청장은 "POD는 비 온 날 적중률이고 CSI는 더블 패널티 스코어로 엄격한 지표다. 각 지표마다 장단점이 있어 종합지표를 만들어 국민 만족도와 기술 개선을 대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후노동위 전체 · 02:08:07**, 비 안 오는 날을 포함한 ACC 90% 이상 강조가 실제 강수 예측 실패를 은폐한다는 비판은 해소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ACC, POD, CSI를 통합한 종합지표 개발, 호우특보 선행시간 구역별 차별화, 중기예보 신뢰도(ABC 등급) 11월 도입을 약속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33:52**.

국가기상슈퍼컴퓨터 5호기 유찰과 인프라 위기 어기구 의원은 2025년부터 추진한 슈퍼컴퓨터 5호기 교체사업이 부품가격·환율상승으로 6차례 유찰되고 예산이 6배 증액(560억→3,360억원)되었으나 성능은 하향(5배→3.1배)된 점을 지적하며 "초기예산이 터무니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5:48:20**. 임 청장은 "부품가격과 환율이 갑자기 많이 올랐고 정보보호망 분리 등 규모 조정도 시도했다. 10월 중순 입찰공고 예정이며 현재 관심 있는 업체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기후노동위 전체 · 05:48:20**, 5호기 노후화로 장애 위험이 증가하고 2028년 상반기 도입 목표가 지연될 경우 현업 예보모델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상청은 2027년 상반기 계약·하반기 초기분 도입, 2028년 상반기 도입 완료를 약속하고 5호기 안정성 강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23:04**.

해상관측망 공백과 관측장비 노후화 이현승 의원은 특보구역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해상관측장비가 육상 650개 대비 108개(부이 47개, 등표 61개)로 부족하고, 특정관리해역 19곳 중 4곳에 부이가 미설치되었으며, 장애 복구시간이 평균 473시간(2025년, 전년 대비 33% 증가)으로 30일 넘는 경우가 38건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3:14**. 임 청장은 "올해 정책연구 진행 중이며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예정이다. 해상은 유지관리가 어렵고 일부 해역은 일본 인접·수로가 좁아 설치 한계가 있으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후노동위 전체 · 01:53:14**, 2021년 확충 약속 후 5년간 7대만 증설된 점은 해명하지 못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5:56:54**. 정해경 의원은 AWS(자동기상관측장비) 99개 교체 예정이나 2027년 예산 44억원이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고, 임 청장은 "아소스를 우선해서 예산 반영했고 AWS는 다른 우선순위에 밀렸다. 국회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5:42:56**.

폭염 중대경보 운영 부실과 부처 간 협력 미흡 김태선 의원은 2026년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 83건 중 67건(58%)이 발령기준(체감온도 38도, 최고기온 39도) 미달이고, 반대로 기준 초과했으나 미발령이 52건이며, 당일 10시 발령이 75%로 사전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33:34 . 임 청장은 "0.5도 오차범위 인정이 필요하고, 전날부터 지자체·행안부와 70% 이상 가능성을 소통했다. 10시 발표해도 실제 낙교는 2~3시이므로 대응시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증결과를 보고 내년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36:09 . 그러나 노동부·문체부 등 부처별 대응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부처 간 협력 강제성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30:30**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신정훈 의원은 기상청 표준관측환경(잔디지면)과 실제 노동현장(아스팔트, 비닐하우스)의 온도차가 3~4도 발생하는데 흑구온도 직접 관측 없이 추정식만 사용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27:03** . 임 청장은 "흑구온도계는 복사열 측정에 유용하나 유지관리가 복잡하고(주 1~2회 청소, 특수도색 필요) 품질관리가 어렵다. 현재 체감온도 회귀식이 흑구온도 기반 상관관계가 높아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기온·습도 회귀식을 사용한다. 서울시 SDOT 47개 지점 흑구온도 자료를 검토 후 활용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33:52** . 그러나 일본은 794개 지점에서 WBGT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점과 대비되어 현장 체감온도 반영 미흡 논란은 지속됐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33:29** .

나경원 의원은 중국이 한반도 15배 면적에 인공강우를 실시 중인데 기상청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뿌리는지 파악도 안 하고 '영향 미미'라고만 답변했으며, WMO 팩트시트는 과학적 논란을 명시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13:07** . 임 청장은 "팩트시트는 처음 본다. 요오드화는 인체 영향이 없다는 게 WMO와 미국 기상조절협회 입장이다. 한중 기술협력 워크숍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논문을 찾아보겠다. 국제기구를 통해 자료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후노동위 전체 · 06:16:33** , 중국 인공강우 실시 현황 파악 부재와 영향 분석 연구 미착수는 국민 건강·안전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서왕진 의원은 연구용역 644건 중 67%가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특정업체들이 돌아가며 수주하는 정황이 있다며 입찰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14:22** . 임 청장은 "기상 정보화사업은 데이터 플로우가 복잡하고 무정지 운영이 필요해 기존 업체 이해도가 높아 들어오기 쉬운 구조다. 국가계약법 절차는 준수했으나 자체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 내년부터 사업설명회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후노동위 전체 · 01:16:52** , 협력업체 간 담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기상청은 흑구온도 기반 체감온도 도입 검토, 서울시 SDOT 47개 지점 자료 품질 검토 후 활용방안 보고, 예보 평가지표 종합화(ACC, POD, CSI 통합), 호우특보 선행시간 구역별 차등화, 중기예보 신뢰도(ABC 등급) 11월 도입을 종합감사(10월 26일)까지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33:52** . 국가기상슈퍼컴퓨터 5호기는 10월 중순 입찰공고, 2027년 상반기 계약·하반기 초기분 도입, 2028년 상반기 도입 완료를 약속하고, GPU 기반 AI 모델 대비해 2030~31년 국가 데이터센터 공동활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23:04** .

천리안위성 5호는 연내 기술이전 완료, 후속 개발공정 7개월 단축해 2031년 발사 일정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하고, 선정업체 능력 확인자료를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24:46** . 해상관측망은 올해 정책연구 완료 후 확충계획을 보고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전원차단·제설제 살포 사전통보 메뉴얼을 협의하며, 내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해양관측 강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2:03:41** .

재난문자 발송체계는 행안부와 협의해 재난성호우 문자를 거부 불가능 단계로 상향하고, 글자수 확대·경고문구 강화를 추진하며, 산림청과 산사태 대피문자 발송시스템 전면 개편(기상청·산림청·광역지자체 직접 연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기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4:50** . 폭염 중대경보는 2026년 검증결과 분석 후 2027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발령기준 오차범위 명확화, 사전 소통체계 강화, 부처별 대응조치 강제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36:09** .

AWS 교체는 국회 증액을 요청하고, 낙뢰관측장비 2027년 2대 교체 예산을 확보하며, 지진관측장비 검정 모수를 조정해 현실적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5등급 관측시설 전국 조사 후 개선계획을 종합감사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 전체 · 05:45:09** . 중국 인공강우는 한중 기술협력 워크숍을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논문을 조사하며, 국제기구를 통해 자료 요구를 검토하고, 영향 분석 연구를 착수해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기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16:33**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예보관 판단과 수치모델 결과 간 괴리를 해소할 구조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제 극한호우 시 KIM 모델은 100mm 이상을 예측했으나 예보관이 30~50mm로 발표한 원인, 예보관 교육·훈련 체계, 수치모델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0:50:18** ,

기후노동위 전체 · 02:18:13 . 방재기상업무규정상 본청과 지방청의 근무단계 조정 기준 차이, 기상청장의 재난 상황 시 현장 지휘 체계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해상관측망 확충 정책연구 결과와 구체적 확충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2021년 확충 약속 후 5년간 7대만 증설된 원인, 특정관리해역 4곳 부이 미설치 해소 계획, 장애 복구시간 473시간 단축 방안 등이 미해결 상태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53:14** , **기후노동위 전체 · 05:56:54** .

천리안위성 지상국 장비 772개 중 657개(85%) 내용연수 초과, 지진관측장비 417곳 중 213곳(51%) 노후화 등 전반적 관측인프라 노후화 대책도 예산 증액 요청 수준에 그쳤다 **기후노동위 전체 · 05:28:54** .

폭염 중대경보 부처별 대응조치 강제성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노동부·문체부 등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강제화할지, 행안부와 협의 결과를 언제까지 도출할지 명확하지 않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30:30** . 중국 인공강우 영향 분석 연구 착수 시기, 한중 기술협력 워크숍 일정, 국제기구 자료 요구 방식 등도 미정이다 **기후노동위 전체 · 06:16:33** . 연구용역 수의계약 전환 사례 자체 감사 결과와 입찰담합 여부 검증도 후속 보고가 필요하다 **기후노동위 전체 · 01:16:52** .

4.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00:00](#) ~08:47:45]. 감사는 ①인사 공정성(청장 비서관 특혜 승진 의혹 및 반복), ②세계유산 영향평가(HIA) 적용 기준의 일관성(종묘·태릉CC·새만금 등), ③문화유산 안전관리(경북궁 화재·힌개미 방제), ④국제협력(사도광산 전시·중국 동북공정 대응), ⑤예산 집행(유네스코 부산 행사·이집트 ODA 부실) 등 5대 영역에 집중되었다.

핵심 판단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 조정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세운사지구(종묘 인근 180m)에는 HIA 미실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4:55](#), 태릉CC(세계유산지구 내 13% 중첩)는 7개월 만에 신속 처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11:47](#), 새만금 국제공항(서천 갯벌 인근)은 법원 취소 판결 후에도 소극 대응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2:00:00](#). 위원들은 "사업 시행자의 협조 태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며 원칙 부재를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50:09](#).

쟁점별 심층 분석

1. 인사 공정성 논란과 조직 신뢰 훼손 2026년 8월 28일 사급 승진심사에서 청장 전·현직 비서관(다면평가 34위·인사팀장)이 56명 중 5명 승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직원 반발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후 9월 2일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해 5명 중 3명을 교체하고 두 비서관을 탈락시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16:14](#) ~00:17:54]. 조은희 의원은 청장이 2025년 10월 승진심사위원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변경한 규정 개정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11:08](#). 청장은 "객관적 심사였으나 직원들과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12:13](#), 반복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노조 설문조사 90%가 철회를 요구했고 전 노조위원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10:00](#). 배현진 의원은 인사규정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26:39](#).

2. 세운사지구 개발과 종묘 세계유산 보호 갈등 서울시는 2014년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 고려해 세운재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71.9m로 제한한 조건을 2018년 합의했으나, 이후 145m로 상향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59:02](#). 국가유산청은 2026년 5월 HIA 실시를 명령했으나 종로구는 9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단독 결재로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02:18](#). 진선미 의원은 2025년 7월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에 '이코모스와 협의 완료'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고, 유네스코가 2025년 2월 26일 HIA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영어 원문 해석 불가'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13:18](#). 청장은 9월 23일에야 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조은희 의원은 "세계유산지구 밖 180m 지점이지만 영향권 내 사업"이라며 HIA 대상임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49:31](#).

3. 태릉CC 개발과 세계유산 보호 이중잣대 정부는 태릉CC 부지에 6,8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부지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되고 2023년 강릉능침 앞 시각영향평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51:14](#). 윤용근 의원은 "태릉CC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했다고 하면서 세운사지구는 강력 대응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50:09](#). 청장은 "태릉은 유네스코 요구로 HIA를 실시하여 국가유산위원회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18:00](#), 김승수 의원은 "태릉은 2026년 1월 발표 7개월 만에 조속히 의결되었으나 종묘는 지구 밖 180m임에도 HIA를 요구받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11:47](#).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2009년부터 17년간 이전 로드맵 없이 방치되었으며, 12월 1일 유네스코 제출 시한이 임박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09:01](#).

4. 문화유산 안전관리 부실 2026년 경북궁 산비문 화재 발생 시 신고가 20분 지연되었고, 청장은 새벽 6시에야 보고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21:26](#). 목조문화유산 560건 중 96건은 화재감지기가 없고 25건은 소화설비가 없는 상태이다. 윤영훈 의원은 "작은 불씨가 500m 이동한 사례가 있어 경북궁 전체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힌개미 방제에 5년간 375억 원을 투입했으나 해당 부분만 처리하고 기화장으로 덮는 임시방편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30:17](#). 윤용근 의원은 "힌개미는 발견 시 이미 30~50m 침범 상태이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과학적 방법이 부재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북궁 창호지의 60%가 관람객이 손가락으로 뚫은 구멍이며, 일부 가이드는 이를 한국 전통문화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33:32](#). 관람객이 5년간 3배 증가(1,781만→2,000만 예상)했으나 안전인력은 1만 명당 0.6명→0.25명으로 급감했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인사 공정성: 조은희 의원은 "청장 취임 후 승진심사위원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16:14](#), 청장은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 했으나 직원들과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12:13 . 배현진 의원은 "인사 취소 배경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인가"라고 추궁했으나 청장은 "직원들과의 차이가 있었고 스스로 반성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22:25** .

세계유산 영향평가 이증잣대: 윤용근 의원은 "태릉CC 개발 전 국토부·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했는가"라고 질의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50:09 , 청장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의원은 "태릉은 신속히 진행되는데 중요만 HIA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18:00** , 청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지구 안팎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적용에서 일관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중국 동북공정 대응: 김룬다 의원은 "중국이 조선족 거주 3성에서 아리랑·농악·한복 등을 중국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데 대응이 세미나·연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13:29** , 청장은 "심각하고 당황스럽다. 중국 동북 3성 조사를 완료했고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AI 학습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15:04** , 명확한 책임 주체·중장기 계획·예산 계획이 부재한 상태다. 배현진 의원은 "중국이 발해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왜 1년간 파악하지 못했는가"라고 질의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55:24 , 청장은 "외교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제기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궁 복원추진단 정규 직제 확보를 위해 내년 행안부 협의 시 준비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내년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40:29** . 서울 트리가 마크2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 보존을 위해 한전과 재협의를 하고 6개월 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2월 만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14:31** .

최용천 국가유산청장은 사도광산 전시시설 개선 관련 외교부와 협의 현황(횟수, 참석자, 전달 의견, 반영 여부)을 정리하여 위원장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33:52** . 흰개미 방제 관련 과학적 방법, 전문인력 현황, 조직 체계, 예산 계획을 정리하여 김윤덕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32:29** . 증도가자 금속활자에 대해 활자본 공모가 아닌 기존 자료로 과학적 분석을 재검정하고 번각본과의 차이가 적용 가능한 오차인지 검토하여 별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56:46** . 의성산불 피해 국가지정유산(고은사 등) 복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복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4:24** . 승진심사위원장을 청장에서 차장으로 환원하는 인사규정 개정 검토 및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26:39** . 중국 동북공정(발해 왕실 유산 등)에 대한 대응 자료를 외교부·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2026년 1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8:12:23**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기준의 일관성이 가장 큰 미해결 쟁점이다. 청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지구 안팎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18:00** , 실제로는 태릉CC(지구 내 13% 중첩)는 신속 처리하고 세운사지구(지구 밖 180m)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새만금 국제공항(서천 갯벌 인근)은 법원 취소 판결 후에도 "자연유산은 환경영향평가 내 세계유산 평가 포함 가능"이라며 소극 대응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2:00:33** . 배현진 의원은 "유네스코가 2026년 9월 21일 레터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선행 필수, 국내 환경영향평가만으로 불충분'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2:00:00** . 명확한 적용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사업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16년 지연도 검증이 필요하다.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유산위원회 제출 자료에 하자가 있었고 활자 크기 대조 결과 문제없다는 2023년 감사원 결과가 나왔으나, 국가유산청은 감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49:04** . 임호선 의원은 "당시 유산청 담당자가 '보류하면 번거로우니 부결하라'고 종용했고 정치적 외압 개입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47:29** . 중국이 개성출판 활자를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선전하는 동안 16년째 진위 판단이 미뤄지고 있으며, 2026년 일괄 공모 방식 추진에 대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 부산 행사 예산 집행도 검증이 필요하다. 청장이 13박 14일간 최고급 호텔(일반실 60만 원~최고 1,400만 원)에 숙박하고 40여 명 규모 집무실(일일 100만 원, 15일 입차 중 6일만 사용)을 운영한 것에 대해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46:12** . 김승수 의원은 "대전-부산 간 KTX 1시간 30분 거리임에도 장기 숙박한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47:23** , 숙박비 세부 내역(객실 종류·투숙 기간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4.5. 법제사법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감사는 검찰 개혁, 교정행정, 외국인 정책, 피해자 지원 등 법무·사법 전 분야를 망라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축으로 수렴된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영치금 관리 문제(1년간 약 22억 원 입금)와 교도소 내 우표 도박 등 교정행정의 구조적 허점 [법사위 2부 · 01:16:37](#), 둘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대책 부재와 검찰인권준중미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논란 [법사위 2부 · 02:04:06](#), [법사위 2부 · 03:09:08](#), 셋째, 화성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과 유학생 불법 배달업 종사 등 외국인 인권·관리 실태 [법사위 1부 · 07:44:02](#), [법사위 1부 · 07:59:17](#)이다. 법무부는 영치금 제도 개선안을 국감 종료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사위 2부 · 01:17:4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조건부 답변에 그쳤다 [법사위 2부 · 02:08:24](#).

쟁점별 심층 분석

1.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관리 문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이 1년간 19억 5천만 원, 김건희가 2억 4천만 원 등 총 22억 원의 영치금이 입금됐으며,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교정본부 직원이 개인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관행을 지적했다 [법사위 2부 · 01:16:37](#). 이는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의원들은 영치금 입출금 횟수 제한 및 증여세 부과 방안을 요구했다 [법사위 2부 · 01:22:07](#). 법무부는 형집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국감 종료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법사위 2부 · 01:17:44](#), 국세청이 통보를 받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법사위 2부 · 01:54:48](#). 정책적 의미는 수용자 영치금 제도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대책 박경수 의원은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나, 국민 61%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법사위 2부 · 02:04:06](#).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이 보완수사로 살인죄 기소된 성공 사례로 언급되며 [법사위 2부 · 03:08:32](#), 향후 유사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후 부작용과 피해자 구제 문제 발생 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법사위 2부 · 02:08:24](#), 현 단계에서는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간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3. 검찰인권준중미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김태규 의원은 미래위원회가 선정한 19건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8건(42%)을 차지하며,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법무부 장관은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2부 · 03:09:08](#), [법사위 2부 · 03:11:45](#). 법무부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지시했으나 대검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제정했다고 해명했으며 [법사위 2부 · 03:11:45](#), 법무부가 법 규정을 넘어서 지휘를 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2부 · 03:13:20](#). 그러나 법무부 공문에서는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법사위 2부 · 03:13:20](#), 법무부와 대검 간 지휘체계의 모순이 드러났다.

4. 화성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박은정 의원은 2026년 8월 27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과정에서 목 조르기, 갈비뼈·명치 가격, 덕데이프로 입 봉쇄, 두건 씌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영상을 공개했다 [법사위 1부 · 07:44:02](#).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으나 보호소 직원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법사위 1부 · 07:45:36](#), 법무부 차관은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착수를 약속했다 [법사위 1부 · 07:47:15](#). 정책적 의미는 외국인 인권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퇴거 과정의 물리력 사용 기준과 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5. 외국인 유학생 불법 배달업 종사 실태 김기표 의원은 2023년 7월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책 이후 베트남 유학생들이 대거 불법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1부 · 07:59:17](#). 2026년 1~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 1,132명, 보험사기 37건 1억2천만원이 확인됐으며 [법사위 1부 · 08:00:50](#), 틱톡 등 SNS에서 조직적으로 배민·쿠팡 계정 대여, 오토바이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사위 1부 · 08:00:50](#). 광주 출입국사무소는 14명을 단속했으나 영업점 적발은 0건으로 [법사위 1부 · 08:05:00](#), 단속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남은 간극은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불법취업 단속 체계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6. 마약 수용자 급증 및 교도소 내 마약 유입 주진 의원은 2022년 대비 2026년 마약 수용자가 1.7배 증가했으며, 10대는 5명에서 39명으로 7.8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2부 · 02:49:45](#). 교도소 내 마약 적발 건수도 연간 4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법사위 2부 · 02:51:20](#), 관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마약탐지견 점검이 사전 통보 후 2시간만 실시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2부 · 02:52:28](#). 법무부는 이온스캐너 도입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교도소 내 마약 유입 경로 차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영치금 관리 문제 이성윤 의원은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교정본부 직원이 개인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관행이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법사위 2부 · 01:16:37](#),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영치금 입출금 횟수 제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감 종료 전까지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2부 · 01:17:44](#). 입장 차이는 의원들이 즉각적인 증여세 부과를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박경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검찰 해체의 시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유사 사건 대응 방안은?"이라고 질의했고 [법사위 2부 · 02:04:06](#), 이진수 차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해 해체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자 구제 문제 발생 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2부 · 02:08:24](#). 입장 차이는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법무부는 제도 안착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혐오표현 대응 김민전 의원은 "법무부가 외국인 혐오표현 대응 방안과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설계 방안을 연구한 것이 적절한가? 여론조사 프레임 설정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고 [법사위 2부 · 01:24:41](#), 이진수 차관은 "외국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되, 혐오표현이 조장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했다. 여론조사는 공정한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2부 · 01:31:46](#). 입장 차이는 의원이 혐오가 역사적·경제적 충돌에서 비롯되며 교육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 반면 [법사위 2부 · 01:27:28](#), 법무부는 상호 이해와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법무부는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제도 개선안(입출금 횟수 제한, 증여세 부과 방안 등)을 국감 종료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2부 · 01:17:4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기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법사위 2부 · 02:08:24](#). 정신질환 보호소년을 위한 전문의 확보 및 예산 증액 추진 [법사위 2부 · 01:59:38](#),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 방향 추진 [법사위 2부 · 03:05:37](#),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임신·출산 예외 규정 마련 [법사위 2부 · 02:21:53](#), 교도소 내 우표 도박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법사위 2부 · 03:24:24](#), 친일재산 환수 관련 광복회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조치 [법사위 2부 · 03:15:48](#),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속도 제고 및 군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검토 [법사위 2부 · 02:44:17](#) 등이 약속됐으나 대부분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한동훈 의원 수사기록(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은 김한규 의원이 한 달 전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법사위 1부 · 00:36:52](#). 김의겸 의원은 서부지검 당시 근무 검사 3명(김정훈, 신동원, 김종욱)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법사위 1부 · 08:43:27](#), [법사위 1부 · 08:50:51](#), 문건 존재와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 통계 관련 조작수사 의혹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감사원의 강압감사(잠 안재우기, 거짓답변 강요, 포렌식 남용, 문답조서 짜집기)를 폭로했으나 [법사위 1부 · 07:48:16](#), [법사위 1부 · 07:49:51](#), 검찰이 감사원 녹취록 57건을 보유하면서도 묻지 않고 증거 260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법사위 1부 · 07:52:30](#). 한국이민재단 회계 의혹은 특수관계법인 '지재사'에 2억원 출자 후 전액 손실, 이재사가 다시 플레이온쇼핑에 1억원 출자 후 5천만원 손실이 확인됐으나 [법사위 1부 · 07:54:38](#), [법사위 1부 · 07:56:12](#),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된 4,760만원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사위 1부 · 07:57:46](#). 검찰 미재사건 급증 문제는 공소청 미재사건이 16만건으로 평년 5~6만건 대비 3배 증가했으나 [법사위 1부 · 08:23:43](#),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1년간 동결 상태로 [법사위 1부 · 08:34:09](#), 공판검사 1인당 연간 5천건 처리라는 살인적 업무량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법사위 1부 · 08:25:16](#).

4.6.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9개 국립대학병원·3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립대학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후 첫 국감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약속과 현실 간 괴리가 집중 조명됐다. 의료 일원화 논의 재개, 아동복지 현금지원 확대의 재정 구조 문제,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지역 간 격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균형 문제,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인력 충원 실패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약 43%에 그쳤으며, 제주대·충북대는 10%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20:37](#).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한 명도 뽑지 못했고,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2명이 주 최대 150시간, 월 평균 당직 16.8회를 버티며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28:11](#). 전북대병원은 2026년 7월 전담 전문의 휴가로 신생아가 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18:56](#). 보수 격차가 민간병원 대비 3배 차이 나고(시장이 5억 원, 정규직 채용 시 2억5천만 원),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촉탁으로 채용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4:44](#). 복지부는 신규 전문의 인건비 보조 및 기존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보조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한시적 2년 운영 후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8:26](#).

2. 의료 일원화 논의 재개 가능성 서영석 위원이 의협·한의협 참고인을 통해 학제 통합 방식의 의료 일원화 논의를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22:53](#).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흡수통합이 아니고 기존 한의사 지위·진료권을 인정하며 교육 통합을 먼저 추진한다면 참여하겠다. 단, ①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 ②한 의사 역할 발전을 출발점부터 설계 ③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23:26](#). 의협 전성훈 참고인은 "학제 일원화 참여 의향이 있으며, 기초의학은 공통으로 하고 임상교육은 근거기반으로 설계한다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학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24:02](#).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과 용역 연구 추진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3. 아동수당·부모급여의 미래대응기금 편성 논란 이다은 위원은 법정 아동수당을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27년 3.6조원)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지방교부세 30.5조원을 기금으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13:28](#). 기금은 30% 자체조정이 가능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며, 초과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세 19.24% 자동 배분되던 것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15:36](#). 복지부는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라 기금 안정성과 무관하게 계속 집행될 것"이라 답변했으나, 지방재정 확충 국정과제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20:20](#). 강릉 신장주 아동 사망 사건에서는 월평균 450만 원의 사회복지 급여가 부모 유휴비로 쓰였고,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3,736만 원의 사회복지 급여와 27만 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됐으나 가해자가 활동지원사였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24:35](#).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급여 보호 점검 체계와 환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26:11](#).

4.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지역 간 격차 2024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급식은 현재 전국 평균 3회에 불과하며,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서울·전북 4회, 제주 1.8회, 경북 2.4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37:36](#). 7만 개 경로당에 14만 명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나 현재 4.8만명(공익활동형 29만원, 사회서비스형 76만원)만 배치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38:07](#). 필요 예산은 7,800억원인데 현재 부식비 전용 가능액은 107억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02:33](#). 복지부는 "경로당별 상황이 다르므로(인력 없는 곳, 주방 없어 배달하는 곳 등) 실태 파악하고 지역과 협의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40:44](#).

5.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균형 문제 이소희 위원은 사망·중상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개정법이 환자 피해구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1:46:30](#). 박호균 변호사(참고인)는 "중상·사망까지 공소제기 불가는 평등원칙·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위험 소지가 높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로 균형이 상실됐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시행령 위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1:47:33](#). 송기민 교수(참고인)는 "처벌과 배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경제력에 따라 형벌권 작동이 차별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1:51:45](#). 의협은 "필수의료 행위 범위가 협소하고 12대 중과실 해석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국립대병원 육성과 수도권 대형병원分院 신설 모순 조배숙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 목표와 달리 수도권 대형병원分院 10개(서울대 시흥, 서울아산 청라 등) 신설 승인으로 지역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블랙홀 현상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48:25**. 복지부는 10개 중 3개 승인, 3개 미확정, 4개는 제도 시행 전 착수로 개입 여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49:27**. 허중식 의원은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한 국가중앙의료네트워크 구축이 서울대병원 이관 지연(3년째)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12:25**.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이관과 상관없이 현재 기관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관 시기는 법안 통과 시기와 연관돼 있다고만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3:11:24**.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논란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8월 20일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 발표가 2023년 의료법 개정 시 합의(취약지 거주자·장애인 등 5개 군 한정)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56:59**. 약사회는 "시범사업 평가 없이 확대 논의는 부적절하며, 오배송·분실 등 안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59:24**. 닥터나우는 코로나 시 113만건 배송 중 취약계층이 1.9%에 불과하고 30~50대 중심 이용이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전면 확대가 아닌 의견 수렴"이라 해명했으나, 법 시행 전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58:20**.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오버도즈) 방지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사이 수면유도제(쿨드림) 등 과량복용이 유행하는데 판매 제한이 없고, 참고형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판매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52:25**. 쿨드림은 1일 1회 복용 약품인데 대량 구매가 가능하며, SNS에서 오버도즈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민기 증인(약국 대표)은 "SBS 보도 후 내부 기준을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52:56**. 권영희 증인(약사회장)은 "참고형 약국은 규제가 없고 전문성 기반이 없어 복약지도 취지가 무력화됐다. 투기자본이 면허대여로 수익을 극대화하며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2:54:28**.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복지부는 권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기 배치 계획과 국비 상향 방안을 중감 전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43:37**. 진료시설 국고보조율을 25%에서 통상 복지부 사업 수준(지방 50% 이상)으로 상향 검토하고 예산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50:30**.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7:56**. 국립대병원 신규 전문의 인건비 보조 및 기존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보조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한시적 2년 운영 후 성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8:26**. 경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간 같은 코드 비급여 가격 비교 전소조사, 격차 큰 품목 근거 검토 및 조정, 사용 내역과 홈페이지 고지 항목 대조해 미고지 품목을 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1:08:31**.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 통지 결과, 보고 직원 보호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회의 종료 후 서면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1:11:14**. 부산대병원은 양산 부산대병원장 선임을 10~11월 중 이사회 소집해 완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06:35**.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의료 일원화 논의는 의협·한의협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한의협이 제시한 ①대등한 위치 상호존중 ②한의사 역할 발전 설계 ③진단기기 사용 문제 선결 조건과 의협이 요구한 현대의학 수준 교육 간 구체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과 용역 연구 추진을 약속했으나 일정과 방법론이 불명확하다. 아동수당·부모급여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은 법정 급여를 불안정한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의 적절성, 지방교부세 30.5조원 전환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국회 통제 우회 가능성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경로당 주 5일 급식은 전국 평균 3회에 불과하고 지역별 격차(서울 4회, 제주 1.8회, 경북 2.4회)가 심각하나, 7,800억원 필요 예산 대비 107억원만 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 이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사망·중상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 제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헌법 위반 소지 등이 지적됐으나 시행 전 재검토 계획이 없다.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는 법 시행 전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합의(취약계층 5개 군 한정)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복지부는 "의견 수렴"이라는 해명만 반복했다.

4.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홍근 장관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적극재정을 통한 명목성장률 25%(45년 만에 최대), 관리재정수지 사실상 균형(20년 만), 국가채무비율 50.5%→48.3%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재경위 1부 · 04:55:17 . 감사의 핵심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타당성과 운영방식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①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요건 10가지 위반, ②지방교부세 30.5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 감소, ③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편중, ④청년정책 성과지표 부실, ⑤AI 국가전략 부재, ⑥국가부채 D4 기준 논란, ⑦연금 고갈 대책 부재 등을 집중 지적했다.

장관은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에 활용하는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구체적 법적 근거·집행계획·성과지표는 미흡했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미래대응기금의 적법성과 국회 통제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요건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①특정 목적이 아닌 광범위한 용도(청년·성장·지방·교육), ②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 부재, ③안정적 중장기 재원 아님(초과세수 의존), ④과도한 여유재원 104조, ⑤국회 통제 약화(30% 변경재량) 등 10가지 위반사항을 열거했다 **재경위 1부 · 05:33:08** .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목적(재정안정화·미래투자)을 위한 신축적 운영이 필요해 적법하게 설계했다"며 사업성 계정(45조)과 금융성 계정(여유재원)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기금이라 답변했으나, 구체적 법 조항 제시는 없었다

재경위 1부 · 05:32:03 .

한국재정학회회는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21.7조(사업 지출의 48%)에 달하며, 5개 계정(총괄·청년·성장·지방·교육) 간 중복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재경위 1부 · 05:36:09** . 장관은 "국회 심의를 거치므로 통제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나, 30% 변경재량이 실질적으로 국회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2) 지방재정 축소 논란

이춘석·정태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현행 산식 대비 30.5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5조 원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로 경북 7조, 경남 6.7조, 전남 5조, 충남 4.7조 등 대규모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지방주도 성장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재경위 1부 · 05:31:00 . 장관은 ①내년도 교부세 77.2조(전년 대비 11.3% 증가), ②2028년 101조로 증가 전망, ③3.5조 자율재원 추가 편성을 들어 총량 기준으로는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재경위 1부 · 05:31:33** .

그러나 10년 이동평균 반영으로 전 정부 세수결손 영향이 내년까지 미치며, 단년도 감소 영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관은 "부족하다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나 **재경위 1부 · 05:34:59** , 5조 여유재원의 배분 기준과 시기는 불명확했다.

3) 호남 편중 예산 배정

박수영·김상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전남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남카르텔 삼짓돈'이라고 비판했다. 130개 사업 중 상당수가 호남권 집중이며, 단년도 사업은 8개(6%)에 불과해 3~4년 내 다 쓸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재경위 1부 · 07:32:11** . 장관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율 투자 결정"이며, "용인은 포화 상태이고 전남은 용수·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경위 1부 · 08:01:15 .

또한 영남권 우주항공(300조), 충청권 디스플레이(300조) 등 타 지역 투자도 균형있게 이뤄진다고 설명했으나 **재경위 1부 · 07:33:16** , 구체적 지역별 배분 내역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색채로 접근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장관의 답변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

4) 청년정책 성과지표 부실

김남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22개 사업 중 ②개 사업(우리아이자리펀드, 청년기회자금)은 성과지표 자체가 없고, ②통합재정사업 평가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채용률 지표 유지, 청년취업진로 지원의 이수율·만족도 중심 평가), ③출산지원금·

청년미래저금 등도 단순 지급률·가입유지율만 측정한다고 비판했다 [재경위 1부 · 05:23:45](#) . 장관은 "부처 자율평가에서 통합평가로 전환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며 성과지표 개선을 약속했으나 [재경위 1부 · 05:26:56](#) , 구체적 개선 일정과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AI 국가전략 부재

이준석 의원은 독자파운데이션모델(기천역)에서 프론티어AI(4.7조)로 사업명만 바뀌며 목표가 불명확하고, GPU 26만 장 구매는 오픈AI(200만 장)의 1/40 수준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1부 · 07:18:51](#) . 장관은 "산은 출자 방식으로 지분 참여하며, GPU 직접 구매 외 리스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고 답변했으나 [재경위 1부 · 07:19:21](#) , 미국식(하이퍼스케일러) 또는 중국식(수직계열화) 중 어떤 전략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의 빈틈을 집중 공략하는 한국식 모델"이라는 답변은 구체성이 부족했다.

국가부채 D4 기준 논란

박수영·안상훈 의원은 IMF-OECD-World Bank가 D1~D4 부채 기준을 정의하고, 10개국(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이 D4(연금총당부채 포함)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1부 · 07:14:26](#) . 장관은 "D2가 국제 비교 기준이며, 연금총당부채는 국제 비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으나 [재경위 1부 · 07:15:00](#) ,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데이터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관은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경위 1부 · 07:17:03](#) , 사전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연금 고갈 대책

윤영석 의원은 국민연금이 2060년대 고갈 예정이며, 현 대학생은 60대에 연금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국가지급보장 조항에도 구체적 재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1부 · 08:06:32](#) . 장관은 "경제성장을 통한 해결이 희망이며, 모수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금 수익률 제고도 노력한다"며 "복지부가 내년부터 필요 재원 검토를 시작한다"고 답변했으나 [재경위 1부 · 08:09:45](#) , 기획예산처 차원의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제도적 대책도 부재했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장관은 다음 사항을 약속했다. ①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2개 사업(우리아이자리펀드, 청년기회자금) 성과지표 마련(금융위 협의) [재경위 1부 · 05:26:56](#) , ②지방교부세 감소 문제 국회 심의단계 추가 검토 [재경위 1부 · 05:34:59](#) , ③D4 국가부채 기준 관련 국제기구 데이터 확인 및 재검토 [재경위 1부 · 07:17:03](#) , ④의료·교육 데이터 API 공개 및 AI 주치의 개발(과기부·복지부·교육부 협의) [재경위 1부 · 07:53:05](#) , ⑤주거안정 119만 호 목표 달성 예산 추가 지원 검토 [재경위 1부 · 08:07:36](#) , ⑥사이버보안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 AI 보안솔루션 지원(500억) [재경위 1부 · 07:57:23](#) , ⑦범죄예방·치안 예산 재검토 [재경위 1부 · 08:27:16](#) , ⑧세만금 사업 임대공단 국비 지원 비율 재검토 및 교통인프라 추가 반영 [재경위 1부 · 08:21:13](#) , ⑨복지 프로그램 중복 조정 및 의무지출 구조조정 [재경위 1부 · 07:50:55](#) .

대부분 약속이 "국회 심의단계" 또는 "기한 언급 없음"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며, 이행 여부를 추적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첫째, 미래대응기금의 국가재정법 적합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배준영 의원이 제시한 10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장관은 "적법하게 설계했다"고 반복했으나, 구체적 법 조항과 법제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 감소의 실제 영향과 보완 방안이 불명확하다. 장관은 총량 기준 증가를 강조했으나, 경북 7조 등 시도별 단년도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3.5조 자율재원과 5조 여유재원의 배분 기준·시기·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지역별 배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장관은 영남권 우주항공(300조), 충청권 디스플레이(300조)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사업명·예산·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호남 편중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 130개 사업의 지역별·분야별 상세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

넷째, AI 국가전략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 미국식·중국식·한국식 전략 중 어떤 방향인지, GPU 구매 외에 어떤 독자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하다. 프론티어AI 4.7조 투자의 성과지표와 평가 방법도 불명확하다.

다섯째, 연금 고갈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장관은 "경제성장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으나, 2060년대 고갈 시점까지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주도 검토를 언급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

4.8. 정무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8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의 최대 쟁점은 2026년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도입 과정의 불투명성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2026년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금융부 전 정책실장 주도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친 금융위 소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 1부 · 05:49:44). 이 외에도 신한은행 고객정보 25,727건 유출 사고의 내부통제 실패 (정무위 2부 · 01:49:16), 가계대출 총량 목표의 급격한 상향(1.5%→3%) (정무위 2부 · 02:22:28), 국민성장펀드 운영의 공정성, 전세사기 관련 은행 대출심사 부실, 금융권 AI 해킹 대응 미흡 등이 집중 논의됐다.

쟁점별 심층 분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소재 박준태·송원석·최은석 의원은 1월 13일 이전 금융위 내부 검토자료가 전무하고, 금융감독원 운영보고서는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1부 · 08:08:02). 송원석 의원은 1월 28일 발표 당시 하반기 출시 계획이었으나 3월 18일 2분기로 조기 변경된 의사결정 과정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 2부 · 04:24:31).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 후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정무위 1부 · 07:26:09),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로 상장 5일 만에 음의 괴리율 발생 후 규정 개정에 2개월 소요된 점을 들어 사전조치 부실을 비판했다 (정무위 2부 · 03:53:04). 미국 SEC는 이를 '규제 허점 활용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홍콩은 더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무위 2부 · 03:25:27).

신한은행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과 내부통제 실패 2026년 9월 28일 신한은행에서 25,72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시기 공격받은 국민은행(153건), 하나은행(89건)에 비해 피해가 컸다 (정무위 2부 · 01:49:16). 김연정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이사회가 작년 AI 공격 대비 투자를 경계했음에도 정보보호 예산은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고 편성 예산의 70%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2부 · 01:50:54). 금감원은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부여했으나 한 달 반 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기를 확실하게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정무위 2부 · 01:56:16), 의원은 은행장의 법적·내부규범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2부 · 01:50:21). 박민규 의원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은행 전산망에서 AI 보안도구 활용이 원천 차단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목적 AI를 망분리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 1부 · 06:33:29).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서민금융 악화 금융위는 연초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으나 8월 4개월 만에 3%로 2배 상향했다. 8월 말 이미 목표(4.3조원)를 초과한 5조 900억원이 대출됐다 (정무위 2부 · 02:24:05). 한민수·신동호 의원은 7월 5대 은행 한도가 소진돼 '대출 오픈런' 사태가 발생했고, DSR과 총량규제 병행으로 고소득층이 먼저 한도를 가져가 서민·청년이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1부 · 07:06:54).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민들이 2금융권(금리 9~20%)으로 이동하고, 불계약대출이 4개월간 2조 4,800억 증가했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도 20%가 대출 거절당했다 (정무위 2부 · 02:22:28). 의원들은 "포용금융을 넘어 악용금융"이라 비판했으나, 이 위원장은 "강남3구 등 급등 양상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서민금융은 별도로 빼고 3,500만원 이하는 연소득 한도에서도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1부 · 07:06:54).

국민성장펀드 운영 공정성 문제 박준태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투자심의위원회가 30건 전부를 승인(100%)했고, 투자심의위 반대에도 기금운용심의위가 폴리오사AI 등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1부 · 06:01:15). 송원석 의원은 승인금액 기준 수도권 55.4%, 호남 28.7%, 영남 7.9%로 지역 편중이 심하고, 대기업 86% 중소기업 2%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1부 · 06:49:25). 조정훈 의원은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예비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예비심사 통과 후 본심사·최종심사 탈락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추천 기업은 9일~한 달 내 승인됐으나 일반 경로 신청은 1년 가까이 검토 중이다 (정무위 2부 · 04:40:11). 산업은행장은 "펀드 운용사 선정은 절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2부 · 03:10:18).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전세사기 관련 은행 대출심사 부실 함창민 의원은 강북구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2021년 5~10월 전세자금대출 47건 160억원이 모두 전세사기로 이어졌고, 이 중 20건(48억원)이 같은 임대인이었으며, 6건은 감점평가서 없이, 7건은 차주 소득 없이 대출됐다고 폭로했다 (정무위 1부 · 07:24:36). 해당 임대인 주택에는 이미 압류가 걸려 있었고 연체 중에도 추가 대출이 이뤄졌으나, 은행 내부 감사는 '이상 없음'으로

결론냈다. 함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와 제보자 보호를 요구했다 **정무위 1부 · 07:53:11**. 이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정무위 1부 · 07:55:57**, 구체적 조치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영화 '암살자' 국책은행 투자 논란 기업은행 20억, 산업은행 42억 등 국책은행이 영화 '암살자'에 총 98억(제작비 190억의 50%) 투자했다 **정무위 2부 · 03:39:38**. 박대출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에도 투자 의사록에는 우려나 검증 내용이 없었고, 기업은행 투자 결정(1월 29일)이 행장 취임(1월 23일) 직후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정무위 2부 · 03:40:26**. 반면 민병덕 의원은 "문화 창작 자유와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하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간섭을 경계했다 **정무위 2부 · 02:34:21**. 산업은행장은 "소신대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무위 2부 · 02:04:33**.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기 변경 의사결정 과정 자료를 송원석 의원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정무위 1부 · 07:26:09**.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은행별 점검 대상, 발견 취약점, 개선 및 재점검 내역을 김형현 의원실에 제출하고 **정무위 1부 · 06:18:29**, 보안 목적 AI의 망분리 예외 인정 및 중소 금융사 공동 보안 AI 체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무위 1부 · 06:33:29**. 전세사기 관련 강북구 은행 영업점 대출 사안에 대해 금감원 조사 현황 파악 후 대출심사·내부통제 문제를 조사해 국회 보고하고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무위 1부 · 07:55:57**.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 개선(3년 중장기 로드맵, 은행별 한도 사전 공개, 주택연금 별도 산정 등) 종합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정무위 1부 · 08:05:58**. 생산적 금융 분류 기준과 성과 지표를 통일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합감사 시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정무위 2부 · 03:36:29**.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남부권 지역성장 지원펀드 관할범위에 경상북도를 포함하도록 즉시 조치하기로 약속했다 **정무위 1부 · 06:54:48**.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의 역할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1월 13일 이전 내부 검토자료가 전무하고 금감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은 해명되지 않았다 **정무위 1부 · 08:08:02**.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의 예비심사 기준 공개와 협의체 추천 기업 우선심사 관련 투명성 확보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무위 2부 · 04:40:11**.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시가총액 단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 3년 연속 흑자 기업 76개도 퇴출 대상인 점, 법원이 KEM제약 상장폐지에 집행정지 결정하며 '단순 정량 기준의 위험'을 지적한 점도 개선 방안이 불명확하다 **정무위 2부 · 02:11:01**. 생산적 금융 여신 잔액을 산업은행은 전체 여신과 동일한 277.6조원으로 보고한 반면 기업은행은 37조원(11%)으로 구분 관리하는 등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해소되지 않았다 **정무위 2부 · 03:17:42**.

5. 통합 이행 추적표

총 108건의 명시적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를 개별보고서에서 통합했다. 동일 문구·동일 시각의 중복만 제거했다.

5.1. 국방위원회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진영승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관련 FOC 평가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7:21:44
진영승 합참의장	드론 대드론 TF 운영 결과 및 운용 개념 발전 사항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0:56:08
진영승 합참의장	바디캠 영상 보안 관리 실태 확인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1:43:50
진영승 합참의장	지뢰 탐지 장비 PRS-20K 성능 및 사고 전후 점검 결과 보고	종합국감 전	국방위원회 전체 · 08:18:12
진영승 합참의장	코브라 헬기 조기 도태 시 전력 공백 방지 대책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8:53:56
진영승 합참의장	스마트 글래스 및 중국산 전기차 부대 반입 기준 마련	최단 시간 내	국방위원회 전체 · 08:27:03
진영승 합참의장	동명부대 파병 연장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전체 · 08:48:20

5.2. 국토교통위원회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감면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 국회 예산 심의 시 적극 요청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07:20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	8개 시범 휴게소를 설 연휴 전까지 개장하고, 소상공인 진입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하겠다	2027년 설 연휴 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56:19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확한 미검수율 통계를 재산정하여 보고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미검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24:14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개인정보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 계획을 보고하겠다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6:53:59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	AI 기반 실시간 사고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찰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5:10:07
김성만 자동차손해배상전흥원 부원장	국토부,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출국 전 구상금 확보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8:32:37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 설치 계획을 현재 연 15MW에서 대폭 확대하여 2030년까지 설치 가능 부지를 모두 활용하는 계획으로 수정 보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17:26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	안성시와 협의하여 휴게소 병원 운영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자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 07:22:54

5.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기상청	흑구온도 기반 체감온도 도입 검토, 서울시 SDOT 47개 지점 자료 품질 검토 후 활용방안 보고. 예보 평가지표 종합화 (ACC, POD, CSI 통합), 호우특보 선행시간 구역별 차등화, 중기예보 신뢰도(ABC 등급) 11월 도입	종합감사(10월 26일)까지 보고	기후노동위 전체 · 00:33:52
기상청	10월 중순 입찰공고, 2027년 상반기 계약·하반기 초기본 도입, 2028년 상반기 도입 완료. 5호기 안정성 강화 조치 병행. GPU 기반 AI 모델 대비해 2030~31년 국가 데이터센터 공동활용 협의	2028년 상반기	기후노동위 전체 · 00:23:04
기상청	연내 기술이전 완료, 후속 개발공정 7개월 단축해 2031년 발사 일정 차질 없도록 사업관리. 선정업체 능력 확인자료 의원실 보고	2026년 내 기술이전, 2031년 발사	기후노동위 전체 · 00:24:46
기상청	올해 정책연구 완료 후 확충계획 보고. 한국도로공사와 전원차단·제설제 살포 사전통보 메뉴얼 협의. 내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해양관측 강화 반영. 부이·등표 단계적 확충	정책연구 완료 시, 2027년 기본계획	기후노동위 전체 · 02:03:41
기상청	행안부 협의해 재난성호우 문자 거부 불가능 단계 상황, 글자수 확대, 경고문구 강화. 산림청과 산사태 대피문자 발송시스템 전면 개편(기상청·산림청·광역지자체 직접 연계)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전체 · 01:54:50
기상청	2026년 검증결과 분석 후 2027년 운영방식 개선. 발령기준 오차범위 명확화, 사전 소통체계 강화, 부처별 대응조치 강제성 확보 위해 행안부 협의	2027년 폭염기 전	기후노동위 전체 · 06:36:09
기상청	AWS 교체 국회 증액 요청, 낙뢰관측장비 2027년 2대 교체 예산 확보. 지진관측장비 검정 보수 조정해 현실적 성과지표 개선. 5등급 관측시설 전국 조사 후 개선계획 보고	2027년 예산, 종합감사까지 계획 보고	기후노동위 전체 · 05:45:09
기상청	한중 기술협력 워크숍 통해 실시 현황 파악, 논문 조사, 국제기구 통해 자료 요구 검토. 영향 분석 연구 착수, 결과 의원실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전체 · 06:16:33

5.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9~11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기상청	수익계약 전환 사례 자체 감사 실시, 법 위반 시 감사원 감사 요구. 2027년부터 사업설명회 확대(정부예산 확정 후 관측장비처럼 시행)	자체감사 후 보고	기후노동위 전체 · 01:16:52
기상청	API 인증키 발급 현황 기관별 정리, 자료 호출 실적 모니터링 강화. 한전·전력거래소와 협의체 정례화, 일사량 예측 단일모델→양상을 전환, 불확실성 정보 제공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전체 · 04:46:47
기상청	국제기구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관리 강화. 수료생 사후관리체계 도입, 기상기후분야 직무 중심 취업성과 관리. 진입장벽 조정 및 유관기관 채용 연계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전체 · 05:00:40

5.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허민 국가유산청장	신라왕궁 복원추진단 정규 직제 확보를 위해 내년 행안부 협의 시 준비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하겠다.	내년 3월 행안부 직제 협의 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0:40:29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 트리가 마크2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 보존을 위해 한전과 재협의를 하고, 6개월 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시 등록 만료 전(1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1:14:31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사도광산 전시시설 개선 관련 외교부와 협의 현황(횟수, 참석자, 전달 의견, 반영 여부)을 정리하여 위원장실에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33:52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환경미 방제 관련 과학적 방법, 전문인력 현황, 조직 체계, 예산 계획을 정리하여 김윤덕 의원실에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32:29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태릉 주변 태릉실식 개발 관련 국토부와 사전협의한 근거 자료를 재확인하여 제출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4:35:25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성균관 유림회관 사용허가서 내 5억 원 채무관계 조항 삭제 이행 요구 및 미이행 시 관리위탁 재검토·배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09:38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중국 발해유적 세계유산 등재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협의체 TF 구성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5:57:04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예산 원상 복구 방안 마련하여 이종문 의원실에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02:41

5.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발굴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적극심사 체계 재검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45:10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산업전 장기 참가기업(10년, 9년 연속) 성과 추적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47:49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백제왕도 특별법 시행에 맞춰 TF 구성, '백제왕도 주민 상생 규제 합리화 대책' 수립	2027년(특별법 시행 시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52:55
국가유산청장	증도가자 금속활자에 대해 활자본 공모가 아닌 기존 자료로 과학적 분석을 재검정하고, 번각본과의 차이가 적용 가능한 오차인지 검토하여 별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6:56:46
국가유산청장	의성산불 피해 국가지정유산(고은사 등) 복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복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4:24
국가유산청장	세운사고역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를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대화와 조율 노력을 배가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09:17
국가유산청장	승진심사위원장을 청장에서 차장으로 환원하는 인사규정 개정 검토 및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26:39
국가유산청장	중국 동북공정(발해 왕실 유산 등)에 대한 대응 자료를 외교부·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	2026년 12월(자료 기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8:12:23

5.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7~19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국가유산청장	경복궁 창호지 훼손 등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령 개정(벌금·과태료 상향) 검토 및 국회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38:24
국가유산청장	2023년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복구비 환수 진행 상황 및 손해보전·가압류 등 조치 검토 결과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37:18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여행사업의 반복 선정 사업에 대한 졸업제·지원비율 차등·계속사업 전환 등 출구전략 마련 및 공모 방식 재검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 07:46:21

5.5. 법제사법위원회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법무부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제도 개선안 (입출금 횟수 제한, 증여세 부과 방안 등) 을 국감 종료 전까지 마련	국감 종료 전까지	법사위 2부 · 01:17:44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개선안 제시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08:24
법무부	정신질환 보호소년을 위한 전문의 확보 및 예산 증액 추진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1:59:38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 방향으로 추진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3:05:37
법무부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임신· 출산 예외 규정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21:53
법무부	교도소 내 우표 도박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3:24:24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관련 광복회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조치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3:15:48
법무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속도 제고 및 군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44:17

5.6. 보건복지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표시제도 개선 방안(병원 내 의료인 자격정보 표시, 표준 안내체계 마련)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18:42
보건복지부	노인 외래정액제 부담 절벽 개선 방안을 건보재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22:32
질병관리청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전환 재정당국과 협의 및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24:44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및 의료원별 자구책·지원 계획 수립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36:04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사업 기본계획 수립(거버넌스, 목표, 자원 확보 계획 포함) 및 수요자 중심 예산 편성	올해 중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7:57
보건복지부	혈액제제 운송체계 우체국 위탁 관련 안전성 검토 및 시범 적용 후 가능성 평가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1:48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 국가 통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지역별 공영장례 현황 파악 후 역할 분담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26:27
질병관리청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예산 확보 노력(국회 심의 과정 반영)	2027년 예산 심의 과정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2:32

5.6. 보건복지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통합집중간호병동 참여 기준 개선 및 병원 단위 수가 통합 방안 협의체 구성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42:07
질병관리청	생물테러 대비 탄저백신·에볼라 치료제 예산 확보 노력(예산심의 과정)	2027년 예산 심의 과정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17:44
보건복지부	혈액검사 등 급여 과보상 190% 분석 근거자료 및 상세 내용 제출	국정감사 종료 전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49:54
질병관리청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대상군·재원 활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및 논의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47:28
손영래 복지부 실장	권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기 배치 계획과 국비 상향 방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	종합감사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43:37
손영래 복지부 실장	진료시설 국고보조율을 25%에서 통상 복지부 사업 수준(지방 50% 이상)으로 상향 검토, 예산처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0:50:30
손영래 복지부 실장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2027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7:56
손영래 복지부 실장	국립대병원 신규 전문의 인건비 보조 및 기존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보조 예산을 신규 편성, 한시적 2년 운영 후 성과 확인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18:26

5.6. 보건복지위원회 · 17~24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양동훈 경북대병원장, 복수경 충남대병원장, 김원석 충북대병원장	국립대병원 간 같은 코드 비급여 가격 비교 전수조사, 격차 큰 품목 근거 검토 및 조정, 사용 내역과 홈페이지 고지 항목 대조해 미고지 품목 시정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1:08:31
양동훈 경북대병원장, 복수경 충남대병원장, 김원석 충북대병원장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 통지 결과, 보고 직원 보호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회의 종료 후 서면 제출	회의 종료 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1:11:14
김혜영 부산대병원장	양산 부산대병원장 선임을 10~11월 중 이사회 소집해 완료	2026년 10~11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06:35
김혜영 부산대병원장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 KDI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03:49
김혜영 부산대병원장	부산대병원 본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진입 추진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44:36
김혜영 부산대병원장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 7천억 원 사업 진행사항을 총감까지 보고	종합감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45:10
손영래 복지부 실장	국립대병원 만성 적자 원인과 개선책 관련 연구 자료 및 내부 검토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2:21:37
손영래 복지부 실장	국립대병원 특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방안 검토, 건보 진료비 2천억 환원 방안을 총감 전까지 보고	종합감사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 03:01:08

5.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성과지표가 없는 2개 사업(우리아이자리펀드, 청년기회자금)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26:56
박홍근 장관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에 대해 3.5조 자율재원과 5조 여유재원으로 보완하되, 부족하다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겠다.	국회 심의단계	재경위 1부 · 05:34:59
박홍근 장관	D4 국가부채 기준 관련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데이터를 확인하고, 연금충당부채의 국제 비교 기준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17:03
박홍근 장관	의료 데이터 API 공개 및 AI 주치의 개발을 위해 과기부·복지부와 협의하고, 교육 데이터(EBS 33만 건) 활용을 위해 교육부와 상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53:05
박홍근 장관	주거안정을 위해 119만 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나,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상의하겠다.	국회 심의단계	재경위 1부 · 08:07:36
박홍근 장관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해 과기부·행안부·개인정보위와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AI 보안솔루션 지원(500억) 등을 추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57:23
박홍근 장관	범죄예방 및 치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완하겠다.	국회 심의단계	재경위 1부 · 08:27:16
박홍근 장관	세만금 사업 임대공단 국비 지원 비율(현행 5:5)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했으나, 국회에서 의견 주시면 재검토하겠다. 교통인프라(신공항·신항 인입철도 등)는 추가 반영 예정이다.	국회 심의단계	재경위 1부 · 08:21:13

5.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9~9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박홍근 장관	복지 프로그램 중복 조정과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50:55

5.8. 정무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이어권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기 변경 (하반기→2분기) 의사결정 과정 자료를 송원석 의원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	보충질의 전	정무위 1부 · 07:26:09
이어권 금융위원장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은행별 점검 대상, 발견 취약점, 개선 및 재점검 내역을 김형현 의원실에 제출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18:29
이어권 금융위원장	보안 목적 AI의 망분리 예외 인정 및 중소 금융사 공동 보안 AI 체계 지원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33:29
이어권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관련 강북구 은행 영업점 대출 사안에 대해 금감원 조사 현황 파악 후 대출심사·내부통제 문제 조사, 국회 보고 (제보자 신원 보호)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7:55:57
이어권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 개선(3년 중장기 로드맵, 은행별 한도 사전 공개, 주택연금 별도 산정 등) 종합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종합감사 전	정무위 1부 · 08:05:58
이어권 금융위원장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체 담보평가 관련 금융위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및 은행법 개정 협조 (김용만 의원 요구)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8:35:52
이어권 금융위원장	완전 액티브 ETF(상관계수 기준 없는) 도입 추진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제적 후속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한민수 의원 요구)	종합감사 전	정무위 1부 · 08:05:58
이어권 금융위원장	박대출 의원이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입력변수 28개, 시나리오 7개, 산출물 14개)을 검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	종합감사 전	정무위 1부 · 08:46:38

5.8. 정무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남부권 지역성장 지원펀드 관할범위에 경상북도 포함하도록 즉시 조치	즉시	정무위 1부 · 06:54:48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LCC 본사 소재지 및 부산 거점 기능(항공기 배치, 국제노선 확대, 정비거점, 지역채용) 실제 이행 여부를 책임 있게 점검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45:05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 미승인자(연소득 규제로 거부된 8,517명) 관련 연소득 규제 예외 적용 방안 검토 협조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8:03:24
금융위원장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금감원 감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와 법적 관리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1:50:21
금융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방식을 재검토하고, 성과급 환수 제도(클로백)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1:56:16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 등 특혜 설계가 없도록 하겠다.	최대한 빨리	정무위 2부 · 02:06:42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출시 일정이 조기 변경된 의사결정 자료를 제출하겠다.	국감 일정에 맞춰	정무위 2부 · 04:24:31
금융위원장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개선과 세그먼트 개편안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전 의원들과 논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2:19:12

5.8. 정무위원회 · 17~2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분류 기준과 성과 지표를 통일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감대까지 보고하겠다.	종합감사 시까지	정무위 2부 · 03:36:29
금융위원장	SK하이닉스 솔리다임 해외 상장 시 대응 방안과 국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정리해 종감대까지 보고하겠다.	종합감사 시까지	정무위 2부 · 04:37:01
산업은행장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의 예비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 협의체 추천 기업 우선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투명성·공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4:40:11
산업은행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안 해상풍력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4:29:15
기업은행장	정직 처분 받은 임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된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3:14:54
기업은행장	IBK시스템 교섭단위 분리 재심 신청 근거 규정과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	가장 이른 시간	정무위 2부 · 04:21:40

부록 A. 분석 대상 및 데이터 품질

상임위원회	구분	영상 ID	전사 방식	분량	구조화 결과
국방위원회	단일 영상	Jeix61y8Bik	YouTube 자막	9시간 4분 · 8,881구간	쟁점 7 · 문답 10 · 약속 7
국토교통위원회	단일 영상	Jgedf-zK1eA	Whisper 전사	9시간 4분 · 5,535구간	쟁점 8 · 문답 0 · 약속 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단일 영상	NnqpPyK58lk	Whisper 전사	7시간 5분 · 4,021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단일 영상	K_Rr8KgcU2s	Whisper 전사	8시간 48분 · 5,753구간	쟁점 24 · 문답 34 · 약속 19
법제사법위원회	2부	hxdMRvVkmxs	Whisper 전사	3시간 44분 · 2,135구간	쟁점 8 · 문답 8 · 약속 8
법제사법위원회	1부	UKZR-3c1Y5s	YouTube 자막	9시간 12분 · 8,912구간	쟁점 8 · 문답 0 · 약속 0
보건복지위원회	2부	FRa5nyoHJS0	Whisper 전사	3시간 57분 · 2,068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2
보건복지위원회	단일 영상	LKy9HQOuLmY	Whisper 전사	3시간 12분 · 2,422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2
보건복지위원회	1부	PhxA9pxilOY	YouTube 자막	4시간 11분 · 5,145구간	쟁점 8 · 문답 7 · 약속 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부	0qrg3U0O-us	Whisper 전사	4시간 1분 · 2,182구간	쟁점 0 · 문답 0 · 약속 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부	sudcFXZdhGQ	Whisper 전사	8시간 54분 · 5,105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9
정무위원회	1부	_JuUAqhM6w4	Whisper 전사	8시간 47분 · 5,078구간	쟁점 6 · 문답 10 · 약속 11
정무위원회	2부	JvXn2WJOB68	Whisper 전사	4시간 45분 · 2,160구간	쟁점 6 · 문답 10 · 약속 11

해석 기준과 한계

- YouTube 자막과 Whisper 전사는 발언자 식별, 동음이의어, 숫자·고유명사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
- 본문은 질의자의 문제 제기와 피감기관 답변을 구분해 요약했으며,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 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 [영상ID HH:MM:SS] 는 각 원본 영상 내부 시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원본 영상과 국회 공식 회의록을 대조해야 한다.